

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

Issue 41 / 2007.12.12

□ 호주, 교토의정서 서명

- 12월 3일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였음.
- 호주는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해 왔으나 Kevin Rudd 정부가 집권하면서 교토체제에 참여하게 되었고, 이로써 선진국 중 교토체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.
-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교적 높은 호주는 교토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비난을 받아 왔음.
- 이후 호주는 '08~'12년간 '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서 5% 감축해야 하는 교토협약을 이행하게 될 것임.
- 유엔 환경담당관은 호주의 교토체제 참여는 고무적인 것이며,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참여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에서의 청정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.

(Timesonline, 2007.12.5)

NEWS

- 호주, 교토의정서 서명
- 중국 에너지부 신설 예정
- 미국 상원, 온실가스 규제법안 채택
- OPEC, 에콰도르 석유생산쿼터 배정
- 리비아의 석유증산계획
- EU, Endesa 합병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법규위반 지적
- 중앙 및 남부 유럽 가스파이프라인 통합 논의
- 러시아-우크라이나, 가스 가격 협상 타결
-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사업 확대
- 프랑스의 에너지시장 개방 성과 미약
- 독일, 온실가스 감축계획 승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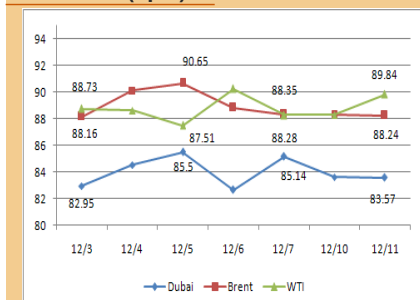
ANALYSIS

- OPEC 총회 결과
- Nabucco 가스관과 이란-파키스탄-인도 가스관 현황
- 아르헨티나의 에너지부족 상황
- 프랑스, 온실가스 배출 차량에 세금 부과

REPORT

- IEA 국가 에너지정책 보고서, Switzerland 2007 Review

Oil Prices (Spot)



자료 : 한국석유공사



ASIA, AMERICA & MIDDLE EAST

□ 중국 에너지부 신설 예정

- 중국은 석유와 우라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재고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, 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임.
 - 이는 5일 발표된 에너지 관련 법 초안에 포함되어 있음.
 - 이번 법안은 경제성장으로 석유, 석탄 및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의 의존도가 증가하고,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제안됨.
 - 동 법안에 따르면, 중국 정부는 Petrochina, Sinopec과 같은 중국 석유 기업에게 재고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.
- 중국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부재로 에너지수급 및 가격 조절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.
 - 신설될 에너지부는 현재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, 이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가격 및 시장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(Platts, 2007.12.5)

□ 미국 상원, 온실가스 규제법안 채택

- 미국 내에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 조항을 담고 있는 환경법안이 지난 5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(The Senate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)를 통과했음.
 -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10여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을 거쳐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 11표 대 반대 8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음.
 - 이 법안은 오는 '50년까지 '05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 70% 감축과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일부 반영한 일종의 배출량 할당 거래제(Cap and Trade)의 도입이 주 내용임.



- 한편 일부에선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경제와 일반 가정이 큰 부담을 져야하며 향후 10년간 2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함.
- 이와 관련하여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규제기관과 석유, 제조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을 거쳐 하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됨.

(NYT, 2007.12.6)

□ OPEC, 에콰도르 석유생산쿼터 배정

- OPEC은 당분간 원유생산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재가입한 에콰도르에 석유생산쿼터를 배정하였음.
- 에콰도르가 OPEC으로부터 배정받은 석유생산 쿼터는 52만 b/d로 '08년 1/3분기부터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.
- 이외에도 OPEC은 앙골라에 190만 b/d를 배정함으로써 이라크를 제외한 12개 회원국들의 공식 생산량은 2,967만 b/d에 달하게 됨.
-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인 Petroecuador와 다른 민영회사들은 현 생산량이 50만5,000 b/d이며, 1만 b/d를 생산하고 있는 15블록에서 5천 b/d를 추가하여 '08년부터 15,000 b/d를 생산할 것을 계획함.

(EFE, 2007.12.6)

□ 리비아의 석유증산계획

- 리비아석유공사는 현재 리비아의 석유생산이 175만 b/d이지만 향후 5년간 3백만 b/d로 증대하는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밝힘.
- 이를 위해 '12년까지 \$300~400억 가량 투자할 것이며 석유부문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음.
- 리비아에서 최근 10개의 신규 유전이 발견되었음.
- 지난 3일 캐나다 Verenex 에너지회사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남동부에서 약 250 km 떨어진 Ghadames 광구에서 유전을 발견했음.



- 동 유전의 지분구조는 캐나다 회사가 13.7%, 리비아 석유공사가 86.3%임.
-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제 2위의 석유생산국으로 170만 b/d을 생산하며 약 42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.
- 리비아는 '10년부터는 3백만 b/d로 증산할 계획이며, 리비아 정부는 '08년 석유공사의 사업실행을 위해 \$32억 1,600만을 투자기로 결정하였음.

(www.alarabonline.org, 2007.12.4)

EUROPE & AFRICA

□ EU, Endesa 합병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법규위반 지적

- EU는 Enel과 Accionad의 Endesa 합병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부당한 세금 및 인수조건의 대부분이 비합법적이라고 하며 '08년 1월 10일까지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함.
- EU는 스페인 국가에너지위원회(CNE)가 EU의 시장자유화 정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원국들 간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함.
- 만약 스페인 정부가 비합법적인 인수조건을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직접 스페인 정부의 위법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실행할 것이라고 함.
- Acciona와 Enel은 지난 10월 Endesa 보유지분을 약 90%까지 증가시킴.
- CNE는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Endesa 합병계획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였으며 E.ON의 Endesa 합병진행시에도 위법으로 인하여 EU로부터 경고를 받았음.

(AP, 2007.12.5)

□ 중앙 및 남부 유럽 가스파이프라인 통합 논의

- MOL Plc의 자회사인 MOL Natural Gas Transmission Co는 중앙 및 남부 유럽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합하여 운영할 가스수송회사 설립계획을



발표하였음.

- 이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합하면 유럽 최대 규모의 가스파이프라인(27,000km)이 구축될 것임.
- 이번 논의에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세르비아, 루마니아, 불가리아, 오스트리아의 가스 회사가 참여하였음.
- 동 지역 가스수송 부문의 자산이 통합되면,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하여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이 용이해질 것이며, 가스 공급 부문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.

(MOL Plc., 2007.12.5)

□ 러시아-우크라이나, 가스 가격 협상 타결

-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가스프롬은 내년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현재보다 38%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.
- 가스프롬은 협상 타결로 내년도 가스 가격이 올해 1천m³당 \$130에서 \$179.5로 인상됐다고 밝힘.
-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80%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지나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받는 통과료를 \$1.6에서 \$1.7로 인상하기로 하였음.
- 한편, 급격한 가격 인상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발도 있음.
- 실제 우크라이나는 가스 가격을 \$160대로 가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가스프롬 역시 25% 내외의 인상폭을 주장해 왔음.
- 그러다가 지난달 27일 가스프롬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현재 \$100에 구입하였던 가스를 내년 상반기 \$130, 하반기에 \$150를 주고 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음.
-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요 가스 수출국들의 잇따른 가스 가격 인상으로 가스프롬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 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



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EU에 수출하는 가스 가격은 \$250에서 \$3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(Reuters, 2007.12.5)

□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사업 확대

-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기업 Sentula Mining은 Aquila Resources 및 Jonah Capital과 보츠와나에서의 석탄 프로젝트에 합의하였음.
 - Sentula Mining는 이번 프로젝트에 '15년까지 총 \$160억을 투자할 예정임.
 - Aquila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50%의 지분을, Sentula와 Jonah는 각각 25%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예정임.
 - 이번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력 및 연료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, 보츠와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를 희망하고하고 있음.
- 동 프로젝트가 진행될 3개 지역의 석탄 매장량은 67억 톤에 이름.
 - 이번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은 '11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, '12년부터 석탄생산이 개시되어 연간 2,000만 톤이 생산될 전망이다.
 - Sentula는 국영 전력회사인 Eskom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츠와나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구매를 요청한 상태임.
 - 동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 3,500~4,000 MW 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가능함.

(Business Report, 2007.12.5)

□ 프랑스의 에너지시장 개방 성과 미약

- 지난 7월 1일에 프랑스의 에너지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으나 소비자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(CRE)가 발표함.
 - CR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전력의 경우 6,100명의 소비자가 '자유요금제'를 선택하였고, 이 중 1,000명은 EDF



- 및 지역 전력판매회사의 요금제로 변경함.
- 가스의 경우 '자유요금제'를 선택한 소비자 13,300명 중 7,100명이 GDF 및 Total, 지역 판매회사의 요금제로 변경함.
 - 기업을 포함하여 전력의 경우 총 31%, 가스의 경우 41%의 소비자들이 '자유요금제'로 변경하였음.
 - CRE가 발표한 수치는 업체들이 밝힌 수치보다 훨씬 밑도는데, 이는 소비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.
 - 현재 소비자들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'자유요금제'로 변경할 경우 다시 규제요금제로 재변경할 수 없다는 것임.
 - '10년 7월 1일까지 소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새 거주지에 대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.
 - 프랑스의 에너지시장 개방으로 전력부문에는 Direct Energie와 Electrabel(Suez의 자회사), Enercoop, GDF, Poweo가 새로 진출하였고, 가스부문 신규업체는 Altergaz와 EDF, Poweo임.

(Les Echos, 2007.12.4)

□ 독일, 온실가스 감축계획 승인

- 독일 내각은 '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'90년 대비 40% 감축하기 위한 14개의 법안 및 법령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는데, 이는 EU가 제안한 20~30%를 상회하는 수치임.
- '08년 예산 중 26억 유로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투자할 예정으로 '05년 대비 200% 증가한 금액임.
- 현재 독일은 교토의정서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21%에 근접한 18.4%의 감축을 기록하였음.
- 동 프로그램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'20년까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5~30%로 확대하는 것인데, 이는 소비자들의 전력요



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.

- 또한 '09년부터 연간 5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것임.
- 전기절약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오래된 건물을 재정비하거나 신축하여 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할 예정임.
- 수송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식물성 대체연료 사용비중을 '20년까지 10%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.
-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'20년까지 310억 유로가 투자될 것이며,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360억 유로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번 투자로 신재생 에너지부문에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.

(France2, 2007.12.5)



1. OPEC 총회 결과

□ 개요

- OPEC 제 146차 임시총회가 12월 5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됨.
 - 12개 회원국 및 에콰도르와 러시아, 이집트, 수단, 시리아 4개국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함.
 - 총회는 에콰도르의 회원국 복귀를 승인함으로써 OPEC은 총 13개 회원국으로 확대됨.

□ 세부내용

- 주요 결과
 - 추가 증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함.
 - 석유시장 수급상황을 검토한 결과, 현재까지 원유수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다는 인식과 투기자금의 대규모 상품시장 유입 등 수급외적 요인 및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'08년부터 적용되는 앙골라와 에콰도르의 생산 쿼터를 각각 190만 b/d와 52만 b/d로 합의.
 - 차기 총회를 2008년 2월 1일, 정기총회는 3월 5일 각각 비엔나 OPEC 본부에서 개최기로 함.
- 주요 반응과 분석
 - OPEC은 공식 증산합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 - 실제로 OPEC의 최근 공급물량은 지난 9월에 합의한 증산물량 50만 b/d를 초과하고 있음. 이는 앙골라와 이라크의 생산량 증가의 효과임.
 - IEA는 OPEC의 산유량 동결합의에 대하여 유가 안정에 대한 소비국들의 기대감이 좌절되었다며 유감을 표시함.



- OPEC의 산유량 동결에도 불구하고 Nymex 선물유가는 미국시장의 경기악화 우려로 하락 마감됨.

※ Nymex WTI(12/5): \$87.51(-1.13), ICE Brent:(12/5): \$90.65(+0.52)

- OPEC은 '08년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원유가격이 극도의 약세로 내몰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증산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로이터 주요기관 향후 유가전망 조사(11/26)

(단위: US\$/Bbl)

	2007년 4분기		2008년 1분기		2008년	
	WTI	Brent	WTI	Brent	WTI	Brent
26개 기관 평균	81.81	79.86	78.28	77.18	74.43	72.88
도이치뱅크	90.00	90.00	85.00	85.00	80.00	80.00
CGES	-	88.00	-	91.60	-	77.00
Barclays 케피탈	90.70	87.60	81.00	79.00	79.00	77.40
BNP 파리바스	95.20	92.50	92.30	90.30	88.80	87.00
EIA/US	86.93	-	82.33	-	79.92	-
ESAI	-	-	-	-	75.50	75.30
Petrometrix	88.46	86.07	77.50	76.50	76.88	75.63
골드만삭스	83.30	81.80	82.00	80.50	85.00	85.00
ING	88.00	85.00	80.00	78.00	76.00	74.00
메릴린치	80.00	79.00	78.00	77.00	73.00	72.00

□ 시사점

○ 향후 유가전망

- OPEC의 산유량 동결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둔화와 석유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내년초까지 \$85/Bbl 내외 (두바이 기준)의 보합수준으로 전망됨.

(mblee@keei.re.kr)



2. Nabucco 가스관과 이란-파키스탄-인도 가스관 현황

□ 개요

- Nabucco 가스관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스피 해 에너지 자원 수송로로써 이란-파키스탄-인도 가스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□ 세부내용

- Nabucco 가스관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사는 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최종결정을 '08년 1분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함.
 - 원래 계획대로라면 '07년 말까지 프로젝트 추진 결정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자금조달 문제 및 가스공급이 충분할 지에 대한 의문으로 결정이 늦추어지고 있음.
 - Nabucco 가스관은 계획상 카스피 해 횡단 가스관(TCP)과 연결될 예정이며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. 그러나 매장량을 고려할 때 투르크멘의 참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음.
 - ※ Nabucco 가스관 길이는 3,300 km, 구경 56 인치, 예상 공사비는 \$5~6십억로 연간 최대 31억 m³의 수송능력으로 EU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. '09년 공사가 시작되어 '13년에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며 '12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.
- 이란-파키스탄-인도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해 이란과 파키스탄은 11월 초, 인도의 참여에 상관없이 가스관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함.
 - 현재 인도는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고려와 파키스탄 내의 정치적 불안, 최근 인도 동부 해안에서 발견한 주요 가스매장지가 원인이 되고 있음.
 - 3국간 협상의 실질적인 장애물은 가격결정 문제와 통과료 문제로 이란은 최초 협상에서 \$7/MMBtu를 요구했으나 6월 협상에서 \$4.93/MMBtu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짐.
 - 그러나 최종 협상에서 이란이 3년마다 가격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삽



입하려 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의 반대로 협상이 무산되었음. 인도와 파키스탄은 계약의 총기간인 25년간 가격을 고정시키길 원하고 있음.

- 전문가들은 인도-파키스탄 간의 갈등과 미국의 반대, 이란의 국내 수요 급증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파키스탄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 요구와 인도의 에너지 수요 급증이 프로젝트의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IEA에 따르면 인도의 에너지수요는 '30년까지 에너지수요가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는 \$1.25조를 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임.

※ 이란-인도-파키스탄 수송관은 2,775 km, 예상공사비 \$74억으로 연간 최대 3천만 m³의 가스를 이란의 South Pars 가스전에서 파키스탄과 인도로 공급할 예정임.

□ 시사점

- 이란-파키스탄-인도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에도 정치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란과 파키스탄의 추진 의지와 인도의 실질적 필요로 볼 때 Nabucco 가스관 프로젝트에 비해 추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.
- 이란-파키스탄-인도 가스관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투르크멘-이란을 중심으로 한 카스피 해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란, 터키를 통한 대유럽 가스 수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
(Eurasianet.org, 2007.11.29/2007.12.5)

3. 아르헨티나의 에너지부족 상황

□ 개요

- 아르헨티나 금융회사인 Prefinex는 '09년 아르헨티나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.



- 현재 수급 불균형으로 에너지부족사태가 발생하였으며,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르헨티나는 전형적인 에너지 수입국이 될 것임.

□ 세부내용

- 아르헨티나의 석유생산량은 '98년 88만9,000 b/d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70만8,000 b/d이며, 매장량 또한 '98년 27억5,000만 배럴(가채년수 : 8.5년)에서 현재 19억7,000만 배럴(가채년수 : 7.6년)로 감소하였음.
- 아르헨티나가 가채년수를 1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년간 \$42억을 투자해야 하며 이외에도 매년 \$20억의 투자가 요구됨.
- 현재 정유시설 설비능력의 96%가 가동되고 있으며, 국내 나프타 수요량의 증가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짐.
- 이러한 이유로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가격이 더 상승하기 이전에 투자를 시작해야 할 것임.
- 이외에도 동 조사기관은 에너지부족 사태의 이유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함.
- 한 예로, 원유 국제가가 1배럴당 \$60.9라면 수출업자는 \$42를 가지고 나머지는 국가가 세금의 일부로 거두어들임으로써 재투자를 어렵게 하여 생산량 감소를 야기함.
- 국내시장 수요 충족과 에너지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정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함.
- 정부는 'Energy Delivery' 정책을 통해 발전소 11개를 건설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며 또한 ENARSA는 총 1,000 MW에 이르는 발전소 5개를 매입할 예정임.

□ 시사점

- 아르헨티나의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사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에너지부문 투자부족에 따른 결과임.



- 에너지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, 정부의 면밀한 장기 에너지수급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임.

(www.infobaeprofesaional.com, 2007.12.6)

3. 프랑스, 온실가스 배출 차량에 세금 부과

□ 개요

- 프랑스는 신규 차량에 대하여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을 밝힘.

□ 세부내용

- 이번 제도는 Grenelle 환경기구가 제안한 ‘환경가격표시제’의 첫 번째 적용으로, 벌금으로 인한 수입은 인센티브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기업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환경인센티브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30g 이하인 신차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한정되는데, 이는 신차 전체 판매량의 30%를 차지함.
 - 인센티브 금액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수록 증가되는데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이하일 경우 1,000 유로, 101~120g일 경우 700 유로, 120~130g일 경우 200 유로임.
 - 특별인센티브는 구입시기가 15년이 지난 차량을 폐기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00 유로가 지원됨.
 -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, 특히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정부는 km당 60g 미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차량구입에 대해 5,000 유로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임.
- 온실가스 배출량이 km당 160g 이상인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신차량의 25%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.
 - 벌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, km당 161~165g일 경우



200 유로, 166~200g일 경우 750 유로, 201~250g일 경우 1,600 유로, 251g 이상일 경우 2,600 유로임.

- 전체 신차량의 1%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.
-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(130~160g)에 가까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벌금이나 인센티브가 부과되지 않음.
-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'06년 기준, 전체 신차량의 45%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.
- 인센티브와 벌금의 km당 온실가스 배출량 부과기준은 5g 단위로 2년마다 낮아질 것이며,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개발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임.
- 정부는 이번 벌금/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을 위해 금년 말 전에 이에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채택할 것임.
- 총 75%('06년 기준)의 신차가 이번 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또한 Grenelle 환경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세금부과의 형식은 아닐 것으로 전망됨.

□ 시사점

-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수송부문에 대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.
-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효율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책 설계를 위해 유럽국가의 최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(Europétrole, 2007.12.5)



1. IEA 국가 에너지정책 보고서, Switzerland 2007 Review

□ 개요

- IEA는 스위스 에너지정책 리뷰 2007을 발간하였으며, 전반적인 스위스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함.

□ 세부내용

- 스위스의 유·가스 공급원 및 수입 경로가 다양하여 공급이 안정적이며, 재고량은 IEA가 권고한 비축량 보다 높음.
 - 스위스의 가스 저장시설 용량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에게 대규모 석유 재고 비축을 의무화하고 있음.
- 유럽 전력시장 주요 참여국인 스위스는 '08년 시행 예정인 전력시장 자유화로 인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.
 - 최근 전력시장 개혁을 위한 전력공급법(Law on Electricity Supply)이 승인되었으며, 이 법안에는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독립 규제기구 설립과 송전시스템 독립 운영자, 제3자의 전력망 접근권, 공급자 선택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 - 스위스 전력시장 자유화는 '1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.
- IEA는 스위스 가스시장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.
 - 이를 통해 스위스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스 인프라 건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임.
- 스위스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신규 설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발전용량 문제가 에너지부문의 주요 이슈에 해당함.
 - '07년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르면, 프랑스와의 장기공급계약 만료 및 노후 원전 문제로 인해 '15년부터 '25년까지 공급 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됨.
 - 현재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및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



이나,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과 탄소 배출 문제를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.

- 수송부문이 국가 에너지·기후정책에 큰 도전과제임.
 -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알프스산맥을 통과하는 화물수송을 도로에서 철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, 철도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에 있음.
 - 또한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저효율 자동차를 고효율 자동차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임.
- 에너지효율성 향상은 스위스 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으며, 특히 건물 부문에서 큰 성과가 있었음.
 - 이에 스위스 환경 및 수송, 에너지통신부(DETEC)는 '07년 9월 IEA가 G8 국가에 권장하고 있는 가정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을 발표하였음.
- IEA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.
 - 에너지효율향상 인센티브 구축과 발전부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발전 설비용량 증대
 - 일관성 있는 중·단기 에너지 효율 및 기후대응 정책 구축과 에너지 부문의 R&D 발전을 위한 장기 목표 설정
 - 전력시장 자유화 법안을 조속히 시행하고, 가스 시장 자유화 시행 방안 고려

□ 시사점

- 스위스의 성공적인 수송체계 개편과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.
- 에너지시장 자유화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경과를 통해 국내 전력 및 가스시장의 개편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임.

(IEA, 2007.12.3)